

일제 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1930년 부(府)와 지정면(指定面) 지역을 중심으로

이정섭*

The Urbanization and Migration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Lee, Chung Sup*

요약 : 이 연구는 1930년 국세조사 인구자료를 기초로 14개 부, 41개 지정면을 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그 출발지 유형, 입지를 분석하여 당시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당시 도시지역에 유입된 인구의 출생지를 출발지로 간주하고 그 유형과 입지를 우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30년의 부와 지정면은 유입인구의 출발지에 따라 전국적 범위의 출생자들이 장거리 이동한 곳, 인접지역 출생자들이 단거리 이동한 곳 및 두 가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곳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효율적 식민 지배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도시일수록 전국적 장거리 이동자의 유입지라는 성격이 두드러졌지만, 전통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했던 곳들도 주변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식민 도시화라는 정주체계와 전통적 정주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이중적 도시화와 인구이동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일제강점기, 도시화, 부, 지정면, 인구이동, O-D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identify the Origin-Destination(O-D) of migration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based on the census data about Bu and Jijung-myeon. For this, the study analysed the types and the location of the immigrants' origin(birthplace) whose headed for an urban area. In 1930, as the destinations in the inter-regional migration, the urban area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istance: long-, medium- and short-distance. The new urban areas which developed for effective colonial rule by Japanese pulled the long distance immigrant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hosun Dynasty's traditional cities had the inflow of population from the near and hinterland. All in all, it is proposed that the dual settlement systems of colonial and traditional structures, is the key to understand the Korean urbanization processes based on the inter-regional migratio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Key Words :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rbanization, Bu, Jijung-myeon, Migration, O-D

*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yisup@gnu.ac.kr

1. 서론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아픈 기억이지만,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에서 도시화의 움직임이 처음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일제강점기 동안의 도시화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화인지, 부정적 의미의 ‘가(pseudo)-도시화’인지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김홍순, 2011a), 당시 도시화가 우리의 내재적인 힘에 의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산물이었다(권태환, 1990)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소한 인구분포 상으로는 전통적 농촌사회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도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분포 변화라는 정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구이동이라는 동적 요소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필요하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도시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이 전자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의 주된 이유는 인구이동에 관한 당시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호구조사규칙’에 근거했던 인구조사와 ‘한국호구표’,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민적통계표’ 및 ‘국세 조사’ 등 근대적 인구자료들을 기초로 인구분포의 지역별 변화를 추적하여 개괄적인 이동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인구이동의 출발지(O)와 도착지(D)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그간 우리 학계는 일제 강점기 동안 국내 인구이동에 대해서, 첫째 남부에서 북부 지방으로, 둘째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해 왔지만(Lautensach, 1945; 이희연, 2003; 조혜중, 2006),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¹⁾.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1930년도 조선총독부 국세조사, 즉 센서스 자료에 주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25년에 근대적 센서스가 한반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주요 통계수치는 인구와 가구의 지역별 분포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 센서스에서 비로소 출생지(place of birth)별 인구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 사이의 O-D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시점의 자료가 바로 1930년 센서스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당시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의 출발지역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및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일제 강점기의 인구이동 자료

1) 국세조사의 인구이동 O-D 자료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5차례 일제강점기의 국세조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이동에 관련된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몇몇 자료들은 인구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1930년의 출생지별 인구와 관련된 내용, 1935년 일시현재자-일시부현재자별 인구이동, 1940년 출생지별 인구 및 본적지-현재 거주지별 인구에 관련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처음 시작한 Ravenstein (1876)도 19세기 영국 센서스 자료의 출생지(birth-places)를 토대로 하였기에, 1930년과 1940년 국세조사의 출생지·본적지에 대한 정보는 일제강점기 인구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O-D 자료가 될 것이다.

두 시점의 인구이동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30년 국세조사의 출생지별 인구자료는 공간 단위에 따라 전국, 도부(道府)별, 부군면(府郡面)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국 단위 자료는 출생지를 자부면 출생(비이동), 도내 타부면 출생(도내 이동), 타도 출생(도간 이동), 내지 출생(국제이동 중 일본에서 유입), 기타 외국 출생 등 5개로 나누었고, 현재 거주지는 전국 하나이다. 두 번째 도부별 자료는 당시 14개 도와 14개 부 지역이 도착지이고, 출생지는 조선 14개 도, 일본 47개 현 및 대만·화태(사할린)·관동주·중화민국 등 약 70곳이다. 마지막 부군면

표 1. 1930년 국세조사 출생지별 인구자료의 공간 단위별 O-D 구분

공간 단위	현재 거주지(D) 구분	출생지(O) 구분	국적 구분
전국	전국	조선출생-자부면생 조선출생-도내 타부면생 조선출생-타도생 조선의 출생-내지(일본)생 조선의 출생-기타	없음
도부(道府)별	전국/도/부	조선(14개 도), 일본(47개 현), 대만, 화태(사할린), 관동주, 남양, 외국 등	조선인, 일본인, 대만·화태·남양인, 중화민국인, 기타 외국인
부군면(府郡面)별	전국/도/부/군/면	도내생-자부면생 도내생-타부면생 타도생 조선외생	없음

(府郡面)별 단위의 자료에서는 출생지는 도내 자부면 출생, 도내 타부면 출생, 타도 출생, 외국 출생 등 4개 이고, 도-부군-면 단위의 현재 거주지별로 이를 수록하고 있다. 해당 자료별로 O-D 행렬을 만든다면 각각 5×1 , 74×28 , $4 \times 2,711$ 의 값을 가진다. 한편, 공간 단위별 출생지 인구자료 중 도부별 자료는 조선인과 일본인 등 5개 국적 구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국과 부군면별 자료는 구분이 없다.

1940년의 국세조사 중 출생지별 인구자료는 연령을 5세 간격으로 구분하였지만, 도착지는 전국 1곳이고, 출생지는 조선의 자도와 타도, 일본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O-D 자료로는 부적합하다. 반면 본적지-현거주지별 자료의 경우에는 14개 도를 현거주지로, 국내의 도와 부, 일본의 현, 기타 외국 지역 등 88개 지역을 본적지로 설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2) 1930년 국세조사 출생지별 자료를 활용한 도시화-인구이동 분석

이상과 같이 일제 강점기 국세조사 자료들 중 O-D 자료로서 가치를 내재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지만, 모든 자료가 도시화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될 수는

없다.

우선 1930년 출생지별 자료들 중에서 도착지로서 도시에 해당하는 부별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부별과 부군면별 출생지 인구자료이다. 당시의 14개 부 지역을 기준으로 두 인구자료의 O-D 행렬을 비교하면 전자는 74×14 , 후자는 4×14 로서, 전자는 조선의 14개 도와 조선 외에서 유입된 인구수를 식별할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인구자료에서는 도내 자부면 출생(비이동), 도내 타부면 출생(도내 이동), 타도 출생(도간 이동)과 조선 이외 출생(국제 이동)에 국한된다. 또 도부별 출생지 인구자료에서는 국적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부군면별 출생지 인구자료는 이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

다음으로 1940년의 본적지-현거주지별 자료는 O-D 행렬이 88×14 로서 1930년의 도부별 출생지 자료와 비교할 때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자료를 동시에 병합하여 분석하는 것 또는 시계열적인 연구에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O-D 행렬이 불일치하기에 병합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고, 나아가 출생지와 본적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Trewartha and Zelinsky(1955)가 지적한 것처럼, 1940년의 본적지(本籍地; ほんせきち, *honseki*)는 어

표 2. 1930년 출생지별 인구자료와 1940년 본적지별 인구자료의 O-D 구분

1930년 도부별-출생지별 자료		1940년 도별-본적지별 자료	
현재 거주지(D) 구분	출생지(O) 구분	현재 거주지(D) 구분	본적지(O) 구분
14개 도와 14개 부	조선(14개 도), 일본(46개 현), 대만, 화태(사할린), 관동주, 남양, 외국 등	14개 도	조선(14개 도와 19개 부), 일본(65개 현), 대만, 사할린, 남양, 외국 등

는 한 가족의 현주지(*de facto residence*)를 식별하는 일종의 지역주민 신분권(communal citizenship)의 개념이며, 넓은 의미에서 출생지별 통계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본적지는 가장(家長)이 지방 정부에 신고(declaration)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변경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 1930년의 출생지별 자료와 연계하면 적지 않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0년 본적지별 인구자료에서는 현재 거주지를 14개 도 지역만으로 구분하였기에 도시-부 지역으로 인구이동을 고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 이 연구에서는 1930년 국세조사 자료의 도부별/부군면별-출생지별 인구자료를 분석의 최우선에 두었다.

3. 일제 강점기의 도시지역과 도시인구

1) 1913년 행정구역으로서 부 지역 설정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에 우선 도, 부, 군 관할구역을 개편하면서 이전의 13도 12부 317군을 13도 12부 220군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15년 3월에는 각 도별로 도령(道令)을 통해서 4,322개 면을 2,518개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 결과를 기초로 면적·인구·재정적 측면에서 식민지배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지만(손정목, 2000), 도시에 대한 행정적인 규정이 명백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 등

장한 부제(府制)의 실시였다(권태환, 1990).

1914년 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등 12곳이다. 당시 새로 부로 설정된 지역은 농촌지역을 분할하여 군으로 하고, 시가지 지역만을 설정한 것이기에, 최초의 도시 행정구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적인 규정으로서의 부 지역이 과연 진정한 도시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권태환(1990)은 당시 부제의 실시는 일제에 의해 추진된 식민지로서 도시 형성의 시작이었지만, 그 의도는 처음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기반을 무력화시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이들 지역 중에서 조선시대부터 전형적인 도시 기능이 이루어진 곳은 서울, 대구, 평양 등 3곳이고, 나머지는 외세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개항된 곳들이었다는 점, 둘째 조선총독부는 '단위지역의 총인구수'라는 도시지역 설정의 보편적 지표가 아니라, 일본인 거주자 수가 많거나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부로 지정함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15년 신의주, 청진은 인구가 1만 명 미만이었고, 군산, 목포, 마산은 1만~2만 명 인구규모에도 부로 지정되었지만, 3만 명 이상이었던 개성, 군산보다도 인구규모가 훨씬 컸던 전주가 여전히 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손정목(2000)은 1907년의 '한국호구표'와 같은 해 '제2차 통감부통계연보'를 통해서 당시 인구 1만 명 이상의 17개, 그리고 5천~1만 명의 40개 지역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1914년 부 지역과 비교하면 앞의 권태환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본인 거주자가 많은 곳들

이 먼저 부로 승격되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전체 인구는 1만 명 이상이지만, 거주 일본인이 1천 명 미만인 개성, 함흥, 해주, 경성(鏡城), 전주, 통영, 진주, 삼랑진, 충주 등 조선시대 전통적인 읍치(邑治)들은 부로 지정되지 못하였지만, 각각 전체 인구수 7,347명과 9,269명 중 일본인이 2,873명과 2,729명이었던 목포와 진남포는 상위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부로 지정되었다.

2) 지정면제의 실시와 읍제로 개편

일제 강점기 도시지역을 살펴보고자 할 때, 1914년에 시행된 부제와 함께 1917년에 시행된 지정면(指定面)도 고려하여야 한다. 당시 2,512개 면 중에서 23개가 해당되는데, 지정면으로 지정되는 명목상의 근거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수 집단이 되어 그 상황에 부에 가까운 면이지만²⁾, 손정목(1996)에 따르면 지정면으로 선정된 곳의 성격은 표 3과 같이 다양하였다.

이후 1920년 황주군 겸이포면, 1923년 충주, 천안, 여수 등 17개 면, 1926년 제주면 등 2개가 추가되었고, 조선총독부가 1930년 종전의 면제를 읍면제로 다시 개정하면서 다음해 지정면의 행정구역상 명칭은 읍(邑)으로 바뀌었다. 읍면제로 변경한 이후 읍 지역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35년 48개, 1940년 76개, 그리고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116개까지 늘어났다.

3) 일제 강점기 도시인구와 도시화율

1914년 부제 그리고 1917년 지정면제도가 실시된

이후 부와 지정면·읍 지역의 수는 광복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도 마찬가지로였다. 당시 부와 지정면·읍을 곧바로 도시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최소한 행정구역은 도시화율 산출의 초보적인 기준이기에 1915년부터 1944년까지 부와 지정면·읍 지역 인구수 변화를 먼저 정리하였다.

표 4, 5와 같이 부와 지정면·읍 지역의 개수와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몇몇 지정면·읍 지역은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시화율을 계산하면, 1915년 3.12%에서 1930년 9.18%, 1940년 18.64%를 거쳐 1944년에는 23.27%까지 증가하였다.

4. 1930년 부와 지정면 지역의 인구이동

앞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동안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은 자연적 인구증가의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 즉 인구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면제도가 도입 이후인 1920년부터 1944년까지 한반도 전체의 인구증가율은 49.81%인데, 같은 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증가율은 무려 653.80%였다는 것이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근대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변천과 인구이동변천에 있어서 큰 국면의 전환도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구이동 연구의 핵심적 주제들은 누가(who), 왜

표 3. 1917년 신설된 지정면의 성격

지정면의 성격	해당 지역
도청 소재지	청주, 공주, 전주, 광주, 진주, 해주, 의주, 춘천, 함흥
군사도시	진해, 나남, 회령
경부·경의·호남선 연선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	영등포, 수원, 개성, 대전, 강경, 조치원, 김천, 이리
유수한 어항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	포항, 통영
종전의 개항장으로 도시형태가 갖추어진 곳	성진

출처: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p.146.

표 4. 1915-1944년 부별 전체 인구수 변화(명)

부 지역	연도	1915년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서울부		241,085	250,208	342,626	394,240	444,098	935,464	988,537
인천부		31,264	36,490	56,295	68,137	82,997	17,165	213,833
군산부		10,963	14,138	21,559	26,321	41,698	40,553	57,589
목포부		12,782	16,701	26,718	34,689	60,734	64,256	69,269
대구부		32,740	44,707	76,534	93,319	107,414	178,923	206,638
부산부		60,804	73,855	106,642	146,098	182,503	249,734	329,215
마산부		15,545	16,165	22,874	27,885	31,778	36,429	54,454
신의주부		6,110	13,798	23,176	48,047	58,462	61,143	118,398
평양부		45,793	71,703	89,423	140,703	182,121	285,965	341,654
진남포부		22,331	21,419	27,240	38,296	50,512	68,656	82,144
청진부		6,484	11,214	20,649	35,925	55,530	197,918	184,301
원산부		22,413	27,585	36,421	42,760	60,169	79,320	112,901
개성부					49,250	55,537	72,062	76,306
함흥부					43,851	56,571	75,320	112,157
대전부						39,061	45,541	76,675
전주부						42,387	47,230	67,095
광주부						54,607	64,520	82,431
진주부							43,291	53,239
해주부							62,651	82,217
나진부							38,319	34,390
성진부								68,045
합계		508,316	598,055	850,157	1,189,521	1,606,179	2,818,460	3,411,488

자료: 1915-1920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5-1944년 자료는 '국세조사'임.

표 5. 1920-1940년 지정면/읍별 전체 인구수 변화(명)

도	지정면/읍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도	지정면/읍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경기	수원	9,817	11,699	13,182	14,054	28,872	경북	예천					16,383
	영등포	5,633	6,069	8,420	15,460			진주	14,138	20,304	25,190	30,478	
	이천					10,603		진해	13,365	16,711	18,895	19,974	20,371
	안성					13,062		통영	15,015	19,344	22,810	25,021	31,141
	평택					12,097		밀양		14,915	16,743	17,706	19,421
강원	춘천	4,757	8,049	10,122	16,045	29,329	경남	동래		16,871	18,953	19,854	22,144
	강릉		11,480	14,578	16,984	21,213		울산				16,111	16,819
	철원		12,708	15,458	19,876	23,094		김해				23,332	24,074
	고저					13,405		삼천포				19,446	19,806
	장전					15,416		방어진					14,204
	삼척					21,039		장승포					13,526
	원주					13,202		고성					14,848

일제 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1930년 부(府)와 지정면(指定面) 지역을 중심으로

충북	청주	5,288	12,418	16,573	21,981	34,411	경남	하동						12,150
	충주	0	18,813	23,084	26,830	28,809		거창						
충남	대전	6,104	8,614	21,696			황해	해주	14,793	19,287	23,820	30,447		
	공주	7,425	10,690	13,116	12,602	16,372		검이포/송림	10,078	13,936	12,663	17,327	26,324	
	강경	7,209	11,248	12,729	13,682	14,636		사리원		18,588	23,946	30,167	35,904	
	조치원	4,991	6,954	8,400	9,264	9,274		연안						18,331
	천안		10,266	12,644	18,380	15,982		용진						25,084
	논산					11,709		장연						15,647
	장항					12,443		안악						21,083
전북	전주	15,862	22,683	38,595			평북	신천						18,821
	이리/익산	7,267	13,403	17,964	21,219	21,768		재령						18,624
	정주/정읍		13,385	15,944	18,074	19,312		황주						13,359
	남원				15,994	16,437		의주	8,593	11,166	10,042	10,053	10,512	
	김제				18,814	17,951		정주		8,724	9,554	11,938	14,005	
전남	광주	12,667	23,734	33,023			평남	선천		11,732	13,759	17,653	19,798	
	여수		16,445	22,469	28,205	36,495		강계		10,060	9,803	17,703	26,161	
	계주		39,030	39,380	38,290	40,854		북진						24,156
	순천				21,938	27,526		안주		18,226	17,403	18,262	19,412	
	나주				15,839	15,564	함북	순천						16,699
	송정					13,582		나남	7,823	15,562	19,755	24,909		
	별교					24,663		성진	6,512	10,196	13,823	20,094	62,209	
	강진					13,629		회령	9,150	14,821	19,481	23,771	24,980	
	나주					15,564		웅기/선봉		11,240	22,984	26,881	32,018	
	영산포					16,478		나진					30,918	
경북	김천	8,392	13,049	15,520	19,094	30,380	함남	길주						24,903
	포항	6,588	10,826	11,791	14,715	28,349		북청		15,375	17,668	20,532	24,923	
	안동		13,555	14,887	20,088	24,131		홍남					39,477	110,842
	경주		16,881	19,049	21,442	23,207		혜산					14,154	16,434
	상주		24,784	27,355	31,256	30,980		신포						34,689
	감포					13,684		단천						31,118
	영천					17,428		합계	201,467	603,841	743,271	996,334	1,716,549	

자료: 1920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5-1940년 자료는 '국세조사'임.

표 6. 1915-1944년 행정구역 기준 도시지역 전체 인구수와 도시화율(명, %)

구분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4
총인구(A)	16,278,389	17,288,989	19,522,945	21,058,305	22,899,038	24,326,327	25,900,142
부 지역 인구(B)	508,316	598,055	850,157	1,189,521	1,606,179	2,818,460	3,411,448
지정면/읍 지역 인구(C)		201,467	603,841	743,271	996,334	1,716,549	2,615,315
도시지역 인구(D=B+C)	508,316	799,522	1,453,998	1,932,792	2,602,513	4,535,009	6,026,763
도시화율(D/A×100)	3.12	4.62	7.45	9.18	11.37	18.64	23.27

자료: 1915-1920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5-1944년 자료는 '국세조사'임.

(why), 어디에서 어디로(from where to where) 그리고 얼마나 많은(how many) 이들이 이동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 중에서 이 연구는 앞의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출발지(O)와 도착지(D)에 관한 것, 특히 도시지역이 도착한 이들의 출발지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30년에 초점을 맞추었다.

1)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이동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적인 인구이동의 방향성부터 살펴보면,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Lautensach(1945)는 인구과잉인 남부 지역으로부터 아직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한반도에서 주된 인구이동의 방향이고, 그 결과 기존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이의 큰 인구밀도를 균등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이동의 시작이 이미 17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훈구(1936)의 연구 중에 제시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7년 발간) 인구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해당 자료는 1404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 전체와 8도별 인구의 성장과 분포를 수록하였다. Lautensach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삼남(三南) 지방은 1753년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이후 한반도 전체 인구감소의 대부분도 삼남 지방의 몫이었고, 반면 북부 지방은 1852년에서 1904년까지 함경도의 인구 급증을 포함하여 인구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인구 중력(Bevolkerungsgewicht)은 점차 남에서 북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였다.

Trewartha and Zelinsky(1955)는 1925년에서 1944년까지 국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3개 도별 인구분포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대략 천안에서 수원 근처까지 점차적으로 인구분포의 중위점(median point)이 북상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동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부에서 북부로의 인구이동이 일제강점기의 주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Trewartha and Zelinsky는 같은 연구에서 1930년 국세조사의 도(부)별-출생지별 인구자료를 통해 13개 도 지역 간 인구이동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1930년 13개 도 지역 간 인구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자료를 활용·분석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 국세조사를 비롯한 통계 자료들 중에는 한국인 및 일본인, 외국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에 관한 것과 한국인만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조사 항목 중 전체 인구의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한국인만 분리한 것은 일부에 국한된다. 그림 1의 (B)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즉 출생지가 한반도인 인구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2) 도시지역 유입자의 출발지 유형: 14개 부와 41개 지정면을 도착지로

그림 1의 (B)와 같이, 1930년에는 강원도, 함북, 함남, 전북³⁾ 등이 양(+)의 순이동이 나타난 지역이고, 반대로 경북, 전남, 평남 등이 음(-)의 순이동이 발생한 주요 지역들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13개 도별 도시화율이 이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Lautensach(1945)는 이촌향도가 일제 강점기 또 다른 인구이동의 패턴이며, 이로 인해 인구분포와 밀도의 측면에서 도농 간 국지적인 차이가 좀 더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인구유입량이 약 1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던 강원도는 도시화율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지역이었고, 도시화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도는 인구유입량이 약 3천명에 불과하였다. 그 밖의 도 지역 중에서 도시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남, 함북, 경남의 경우, 함북만이 양의 순이동량이 나타났고, 반대로 전북, 함남, 충북은 양의 순이동이었지만, 도시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전국의 개별 도시지역은 비교적 단거리인 인접 혹은 같은 도내의 농촌인구가 유입된 곳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인 다른 도의 농촌인구가 유입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비(非)이동의 비율이 높지만 원래 인구규모가 크거나 자연적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 1930년 당시의 14개 부와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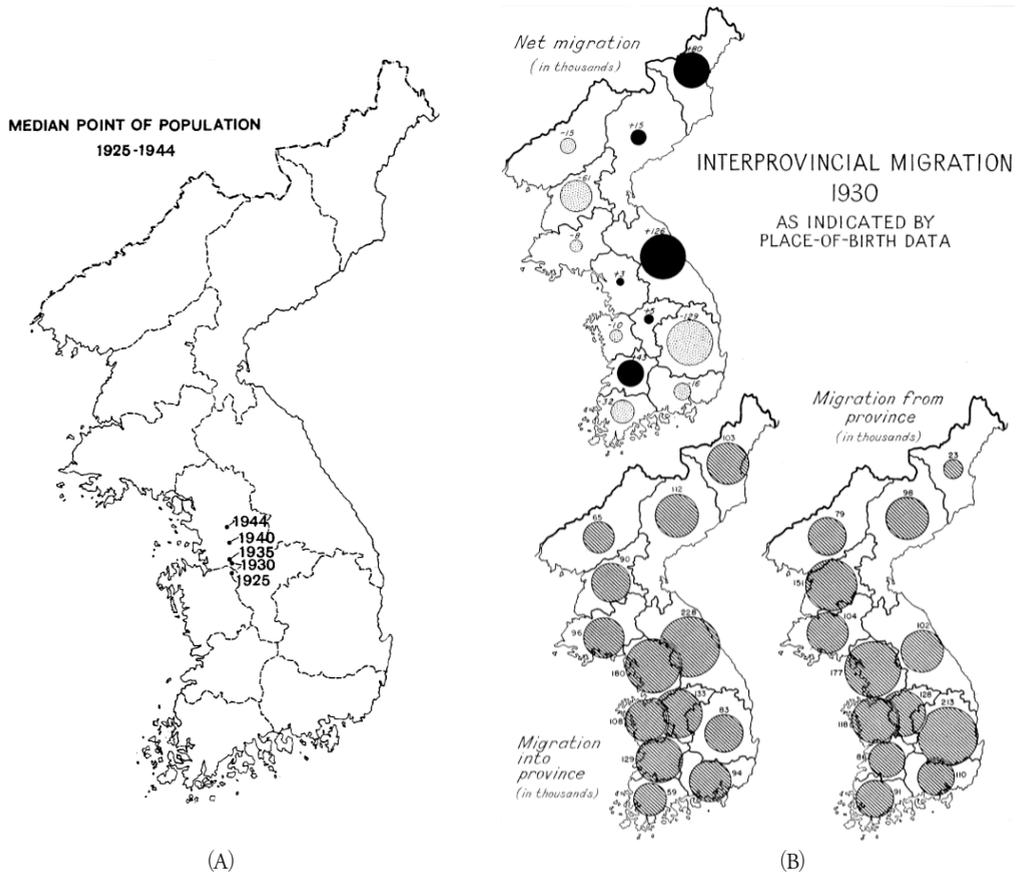


그림 1. Trewartha and Zelinsky(1955)가 제시한 1924-1944년 인구분포 중위점 변화(A)와 1930년 출생지 기준 13개 도(道) 지역 간 인구이동(B)

출처: Trewartha T. G. and Zelinsky W., 1955,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nge in Korea 1925-1949, *Geographical Review*, 45(1), p.15, 18.

지정면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유형을 비이동, 도내 이동, 도간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비이동은 해당 부면 출생, 도내 이동은 같은 도내의 다른 부면 출생, 그리고 도간 이동은 타도 출생인 인구를 해당 부면의 전체 한국내 출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구했고, 이것을 표 8에 정리하였다.

먼저 타도 출생자의 유입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진(64.1%), 용기(58.7%), 철원(45.9%), 원산(41.2%), 군산(40.7%), 곽이포(39.3), 대전(38.5%), 나남(38.4%), 조치원(31.6%) 등이었다. 해당 부면은 개항장이거나 새로운 교통수단 철도의 결절지, 군사 및 지

하자원, 산업시설 입지 등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같은 도내 출생자 유입 비율이 높은 곳으로 신의주(65.0%)가 가장 높았고, 목포, 선천, 익산, 의주, 광주(전남), 사리원, 인천, 공주, 포항, 강계, 마산, 영등포, 평양, 대구 등에서도 전체 인구의 40-50% 정도를 도내의 인구이동자가 차지하였다. 이들 지역은 개항장이었던 곳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전통적 도시기능을 수행했던 곳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이동의 경우는 제주(91.4%)가 가장 높고, 개성(77.6%), 안주(73.7%), 동래(70.7%)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경주, 상주, 통영, 북청, 여수, 안동, 밀양, 진주, 강릉, 정주, 회령, 충주, 해주 등 대

표 7. 1930년 도별 도시지역 인구와 도시화율(명, %)

인구 지역	전체 인구 기준					한국인 인구(추정) 기준*				
	부 지역 (A)	지정면 지역 (B)	도시 지역 (C=A+B)	총 인구 (D)	도시화율 (C/D×100)	부 지역 (A)	지정면 지역 (B)	도시 지역 (C=A+B)	총 인구 (D)	도시화율 (C/D×100)
경기	511,627	21,602	533,229	2,157,413	24.72	380,558	19,597	400,155	2,004,012	19.97
강원	0	40,158	40,158	1,487,715	2.70	0	37,556	37,556	1,473,972	2.55
충북	0	39,657	39,657	900,226	4.41	0	36,584	36,584	890,877	4.11
충남	0	68,585	68,585	1,382,888	4.96	0	59,232	59,232	1,356,942	4.37
전북	26,321	72,503	98,824	1,503,695	6.57	16,894	64,764	81,658	1,467,604	5.56
전남	34,689	94,872	129,561	2,332,256	5.56	26,335	87,992	114,327	2,288,429	5.00
경북	93,319	88,602	181,921	2,416,762	7.53	73,060	83,303	156,363	2,373,856	6.59
경남	173,983	102,591	276,574	2,135,716	12.95	119,747	93,057	212,804	2,045,113	10.41
황해	0	60,429	60,429	1,523,523	3.97	0	54,136	54,136	1,499,643	3.61
평북	48,047	43,158	91,205	1,562,791	5.84	31,445	40,402	71,847	1,519,037	4.73
평남	178,999	17,403	196,402	1,331,705	14.75	148,972	17,053	166,025	1,288,804	12.88
함북	35,925	76,043	111,968	745,124	15.03	25,639	57,402	83,041	701,844	11.83
함남	86,611	17,668	104,279	1,578,491	6.61	66,432	17,093	83,525	1,527,975	5.47
합계	1,189,521	743,271	1,932,792	21,058,305	9.18	889,082	668,171	1,557,253	20,438,108	7.62

자료: 1930년 국세조사/해당 자료 중에서 부 지역은 한국인 인구수만을 구분·추출할 수 있지만, 지정면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및 외국인 등의 총수임. 따라서 이 표의 지정면 한국인 인구는 국적·민족과 상관없이 '출생지가 조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추정한 것으로 다소의 오차가 존재함.

표 8. 1930년 부와 지정면별 비이동, 도내 및 도간 한국인(추정) 이동자(명, %)

행정구역		해당 부면 출생자 수 (A)	도내 다른 부면 출생자 수(B)	타도 출생자 수 (C)	전체 한국 내 출생자 수 (D=A+B+C)	비이동 비율 (A/D×100)	도내 이동 비율 (B/D×100)	도간 이동 비율 (C/D×100)
경기	서울부	179,226	71,387	59,190	309,803	57.85	23.04	19.11
	인천부	19,228	25,652	12,460	57,340	33.53	44.74	21.73
	개성부	37,411	6,647	4,150	48,208	77.60	13.79	8.61
	수원면	5,814	4,725	1,511	12,050	48.25	39.21	12.54
	영등포면	3,324	3,291	932	7,547	44.04	43.61	12.35
강원	춘천면	2,995	3,741	2,174	8,910	33.61	41.99	24.40
	강릉면	7,705	4,027	2,273	14,005	55.02	28.75	16.23
	철원면	5,669	2,248	6,724	14,641	38.72	15.35	45.93
충북	청주면	4,974	5,622	3,842	14,438	34.45	38.94	26.61
	충주면	11,439	5,991	4,716	22,146	51.65	27.05	21.30
충남	공주면	4,247	5,155	2,128	11,530	36.83	44.71	18.46
	조치원면	2,673	2,440	2,360	7,473	35.77	32.65	31.58
	대전면	5,549	4,896	6,536	16,981	32.68	28.83	38.49
	강경면	4,741	3,298	3,443	11,482	41.29	28.72	29.99
	천안면	5,101	4,177	2,488	11,766	43.35	35.50	21.15

전북	군산부	6,151	5,522	8,001	19,674	31.26	28.07	40.67
	전주면	17,009	13,021	4,517	34,547	49.23	37.69	13.07
	정읍면	7,304	5,097	2,544	14,945	48.87	34.11	17.02
	익산면	4,868	7,190	3,214	15,272	31.88	47.08	21.05
전남	목포부	8,558	15,417	4,861	28,836	29.68	53.46	16.86
	광주면	12,388	13,050	3,190	28,628	43.27	45.58	11.14
	여수면	13,336	4,891	2,279	20,506	65.03	23.85	11.11
	제주면	35,521	3,041	296	38,858	91.41	7.83	0.76
경북	대구부	32,980	33,778	12,342	79,100	41.69	42.70	15.60
	안동면	9,220	4,698	413	14,331	64.34	32.78	2.88
	포항면	4,374	4,498	1,241	10,113	43.25	44.48	12.27
	경주면	12,587	4,673	1,054	18,314	68.73	25.52	5.76
	김천면	5,423	5,959	2,720	14,102	38.46	42.26	19.29
	상주면	17,789	7,772	882	26,443	67.27	29.39	3.34
경남	부산부	45,396	45,076	25,793	116,265	39.05	38.77	22.18
	마산부	11,461	10,493	1,967	23,921	47.91	43.87	8.22
	진주면	13,195	8,914	1,446	23,555	56.02	37.84	6.14
	밀양면	9,774	4,282	2,060	16,116	60.65	26.57	12.78
	동래면	12,835	4,211	1,116	18,162	70.67	23.19	6.14
	진해면	10,293	3,834	581	14,708	69.98	26.07	3.95
	통영면	13,603	5,722	1,191	20,516	66.30	27.89	5.81
황해	해주면	11,040	8,729	1,905	21,674	50.94	40.27	8.79
	검이포면	3,147	3,168	4,083	10,398	30.27	30.47	39.27
	사리원면	8,396	10,035	3,633	22,064	38.05	45.48	16.47
평북	신의주부	7,748	22,082	4,127	33,957	22.82	65.03	12.15
	의주면	4,921	4,370	251	9,542	51.57	45.80	2.63
	정주면	4,758	3,492	433	8,683	54.80	40.22	4.99
	선천면	5,762	6,737	563	13,062	44.11	51.58	4.31
	강계면	4,064	4,044	1,007	9,115	44.59	44.37	11.05
평남	평양부	46,976	52,874	22,904	122,754	38.27	43.07	18.66
	진남포부	10,345	14,197	9,363	33,905	30.51	41.87	27.62
	안주면	12,569	2,665	1,819	17,053	73.71	15.63	10.67
함북	청진부	6,189	3,727	17,737	27,653	22.38	13.48	64.14
	나남면	3,426	3,083	4,063	10,572	32.41	29.16	38.43
	성진면	4,265	2,566	5,456	12,287	34.71	20.88	44.40
	회령면	7,862	2,861	4,180	14,903	52.75	19.20	28.05
	웅기면	5,187	2,926	11,527	19,640	26.41	14.90	58.69
함남	원산부	13,246	7,686	14,642	35,574	37.24	21.61	41.16
	함흥부	19,837	12,169	4,374	36,380	54.53	33.45	12.02
	북청면	11,152	4,857	1,084	17,093	65.24	28.42	6.34
합계와 평균		795,051	536,704	309,786	1,641,541	48.43	32.70	18.87

자료: 1930년 국세조사/국적·민족과 상관없이 '출생지가 조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추정한 것으로 다소의 오차가 존재함.

체로 조선시대 읍지에 해당하는 곳들의 비이동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이상의 분석내용만으로 1930년 당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당시 도시지역으로 유입된 인구의 출발지 유형을 기초로 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효율적인 식민지배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도시지역들은 장거리의 도간 이동과 도내 이동의 흡인(pull)지, 조선시대 전통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했던 각 도의 중심지는 도내 이동에서 흡인지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하위의 읍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인접한 농촌지역에서 유입 또는 당시의 높은 자연적 인구증가율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지역 유입자의 출발지 입지: 14개 부 지역을 도착지로

당시 도시화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인구이동의 도착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출발지, 특히

그 입지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런데 출발지의 유형-비이동, 같은 도의 다른 부면 및 타도 출생자-에 관한 것 이외에 출발지의 구체적인 입지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쉽게도 당시 지정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14개 부 지역에 한정된다.

먼저 1930년 당시 14개 부 지역의 인구성장을 살펴보면, 1920년 한국인 인구가 465,375명에서 1930년에는 889,080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부별로는 신의주(345.5%)⁴⁾, 청진(273.9%) 등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고, 부산, 목포, 대구, 함흥, 인천, 평양, 군산 등도 두 배 이상의 인구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개성, 서울, 원산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물론 1920년에서 1930년까지 한반도 전체 인구증가율이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개 모든 부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에, 부 지역 증가 인구의 상당 부분은 유입인구가 차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의 출발지의 입지를 찾기 위해서 도착지는 14개 부 지역, 출발지는 비이동, 13개 도 및 일본(외국 포함) 등 모두 15개 지역인 15×14

표 9. 1920-1930년 부 지역 한국인과 일본인 인구 성장(명, %)

	한국인			일본인		
	1920년	1930년	인구증가율	1920년	1930년	인구증가율
서울	181,829	279,865	53.92	65,617	105,639	60.99
인천	23,855	52,971	122.05	11,281	11,758	4.23
개성	35,426	47,722	34.71	1,212	1,531	26.32
군산	8,243	16,894	104.95	5,659	8,707	53.86
목포	11,270	26,335	133.67	5,273	7,922	50.24
대구	32,451	73,060	125.14	11,942	19,426	62.67
부산	40,532	97,558	140.69	33,085	47,761	44.36
마산	11,923	22,189	86.10	4,172	5,587	33.92
신의주	7,058	31,445	345.52	3,524	7,526	113.56
평양	54,643	116,899	113.93	16,289	20,073	23.23
진남포	16,179	32,073	98.24	3,633	5,333	46.79
청진	6,858	25,639	273.86	4,114	8,873	115.68
원산	19,840	32,241	62.51	7,134	9,260	29.80
함흥	15,268	34,191	123.94	3,097	8,984	190.09

자료: 1920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0년 자료는 '국세조사'임.

표 10. 1930년 부 지역에 거주한 한국인 인구의 비이동 및 도별 출생자 수(명)

O \ D	서울	인천	개성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신의주	평양	진남포	청진	원산	함흥	합계
비이동	165,786	15,776	37,078	4,140	6,858	29,018	32,522	10,317	6,750	43,025	8,956	4,628	10,861	18,641	394,356
경기	60,350	25,225	6,546	987	967	1,398	1,358	300	424	1,751	629	1,427	2,719	1,008	105,089
강원	4,888	505	186	36	41	177	366	10	119	348	43	2,939	2,926	413	12,997
충북	6,324	1,139	110	172	78	1,077	869	44	45	194	22	172	213	111	10,570
충남	11,786	4,471	234	3,323	289	608	677	69	75	262	49	170	314	158	22,485
전북	3,083	346	171	5,293	1,374	644	730	82	30	154	37	73	77	67	12,161
전남	3,260	711	134	1,492	15,046	723	3,413	329	81	223	182	806	205	63	26,668
경북	4,996	614	307	388	277	32,995	15,709	707	113	349	51	798	638	237	58,179
경남	3,526	1,067	319	750	1,068	5,803	41,121	10,173	162	286	135	1,414	595	155	66,574
황해	5,829	2,055	1,889	120	65	147	169	25	431	7,859	6,396	940	2,103	252	28,280
평북	2,463	250	156	10	45	78	99	35	20,882	9,272	1,421	300	690	259	35,960
평남	3,975	564	421	147	129	223	155	17	2,035	52,330	14,041	1,117	3,155	713	79,022
함북	665	55	12	1	29	36	59	2	7	143	5	3,512	258	269	5,053
함남	2,571	154	133	29	41	82	159	46	128	560	88	6,989	7,412	11,772	30,164
일본 등	363	37	26	6	28	51	152	33	163	143	18	354	75	73	1,522
합계	279,865	52,969	47,722	16,894	26,335	73,060	97,558	22,189	31,445	116,899	32,073	25,639	32,241	34,191	889,080
유입자 수(명)	114,079	37,193	10,644	12,754	19,477	44,042	65,036	11,872	24,695	73,874	23,117	21,011	21,380	15,550	494,724
유입자 비(%)	40.76	70.22	22.30	75.49	73.96	60.28	66.66	53.50	78.53	63.19	72.08	81.95	66.31	45.48	55.64

의 O-D 행렬을 만들었다.

1930년 14개 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인구 총수는 889,080명이고 이중 394,356명은 출생한 곳과 거주하는 곳이 동일한 부 지역인 비이동 인구로서 약 44.4%를 차지했다. 나머지가 이동자들인데, 각 부 지역 인구 중에서 유입자의 수가 많은 곳은 서울(114,079명), 평양(73,874명), 부산(65,036명), 대구(44,042명) 등으로 인구규모가 큰 지역들이었다. 그렇지만 유입인구가 해당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청진(82.0%), 신의주(78.5%), 군산(74.0%), 목포(74.0%), 진남포(72.1%), 인천(70.2%) 등 개항장들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표 11은 1930년 각 부 지역에 거주한 한국인 인구의 비이동과 도별 출생지의 비율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부 지역에서 비이동과 도내 이동자의 비율을 합하면 70% 이상이었는 데, 개성은 비이동자, 즉

개성 출생자만으로도 77.7%였다. 그리고 대부분 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의 출생지들은 같은 도내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청진과 원산, 군산 등은 인접한 도 및 상당히 먼 거리에 입지한 도 지역 출생자도 적지 않은 수가 유입되었다.

권태환(1990)은 인구이동에 의한 도시화가 (사회적) 이질성을 증가시키며, 그 이질성의 1차적인 지표는 출생 지역의 차이라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첫째 해당 부에서 출생한 인구의 비율, 즉 비이동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폐쇄성이 높은 곳으로, 둘째 유입된 다른 지역 출생자 가운데 같은 도내 출생자와 다른 도의 출생자 간의 비(比)를 계산한 것이 지역중심성이며, 이것이 높다는 것은 같은 도내 인접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유입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도시의 폐쇄성과 지역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출신지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이

표 11. 1930년 부 지역에 거주한 한국인 인구의 비이동 및 도별 출생자 비율(%)

O \ D	서울	인천	개성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신의주	평양	진남포	청진	원산	함흥
비이동	59.24	29.78	77.70	24.51	26.04	39.72	33.34	46.50	21.47	36.81	27.92	18.05	33.69	54.52
경기	21.56	47.62	13.72	5.84	3.67	1.91	1.39	1.35	1.35	1.50	1.96	5.57	8.43	2.95
강원	1.75	0.95	0.39	0.21	0.16	0.24	0.38	0.05	0.38	0.30	0.13	11.46	9.08	1.21
충북	2.26	2.15	0.23	1.02	0.30	1.47	0.89	0.20	0.14	0.17	0.07	0.67	0.66	0.32
충남	4.21	8.44	0.49	19.67	1.10	0.83	0.69	0.31	0.24	0.22	0.15	0.66	0.97	0.46
전북	1.10	0.65	0.36	31.33	5.22	0.88	0.75	0.37	0.10	0.13	0.12	0.28	0.24	0.20
전남	1.16	1.34	0.28	8.83	57.13	0.99	3.50	1.48	0.26	0.19	0.57	3.14	0.64	0.18
경북	1.79	1.16	0.64	2.30	1.05	45.16	16.10	3.19	0.36	0.30	0.16	3.11	1.98	0.69
경남	1.26	2.01	0.67	4.44	4.06	7.94	42.15	45.85	0.52	0.24	0.42	5.52	1.85	0.45
황해	2.08	3.88	3.96	0.71	0.25	0.20	0.17	0.11	1.37	6.72	19.94	3.67	6.52	0.74
평북	0.88	0.47	0.33	0.06	0.17	0.11	0.10	0.16	66.41	7.93	4.43	1.17	2.14	0.76
평남	1.42	1.06	0.88	0.87	0.49	0.31	0.16	0.08	6.47	44.77	43.78	4.36	9.79	2.09
함북	0.24	0.10	0.03	0.01	0.11	0.05	0.06	0.01	0.02	0.12	0.02	13.70	0.80	0.79
함남	0.92	0.29	0.28	0.17	0.16	0.11	0.16	0.21	0.41	0.48	0.27	27.26	22.99	34.43
일본 등	0.13	0.07	0.05	0.04	0.11	0.07	0.16	0.15	0.52	0.12	0.06	1.38	0.23	0.21

굵은 수치는 각 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 상위 5개 출생지(도)별 인구 비율을 표시한 것임.

들의 비율이 높기에 동질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반대로 폐쇄성과 지역중심성이 낮을수록, 전국적인 인구이동을 받아들이는 지역이자 이질성이 높은 지역이 된다고 제시하였다⁵⁾.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14개 부 지역의 폐쇄성(비이동)과 지역중심성에 대해서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폐쇄성을 살펴보면, 개성과 서울, 함흥 등이 50% 이상, 마산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인천, 군산, 목포, 진남포, 청진 등 대체로 개항장들이 반대로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지역중심성을 살펴보면, 이 연구는 한국인의 인구이동을 우선에 두었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구성의 이질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일본인 등이 포함된 전체 인구의 지역중심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폐쇄성과 지역중심성을 비교하면 일정 정도 도시의 유형이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은 해당 도시의 사회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도시 형성, 성장배경을 알려주는 지표(권태환, 1990)가 될 수 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마산과 함흥은 폐쇄성과 지역

중심성이 모두 높고, 서울은 폐쇄성은 높지만 상대적 지역중심성은 낮으며, 목포와 신의주 등은 낮은 폐쇄성과 높은 지역중심성, 마지막으로 청진, 원산, 군산에서는 폐쇄성과 지역중심성이 모두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들이었다.

일본인까지를 포함한 전체 인구이동에 대한 지역중심성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지만, 서울과 함흥은 높은 폐쇄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중심성이 나타났고, 군산과 부산, 진남포, 청진, 원산은 낮은 폐쇄성과 낮은 지역중심성, 그리고 인천, 목포, 신의주 등은 낮은 폐쇄성에 비해 높은 지역중심성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14년 부제가 실시될 때의 인구기준이 전체 인구가 아닌 일본인 거주자가 주된 것이었기에, 도시로 향하는 인구이동은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이 우선 확인된다. 그리고 서울은 일본인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고 한국인들도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유입된 곳이고, 개성은 인구유입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며, 대구와 평양은 일본인의 유입도 있지만 주변 지역의 한국인 유입량

표 12. 1930년 부 지역의 폐쇄성과 지역중심성 측정(%)

	서울	인천	개성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신의주	평양	진남포	청진	원산	함흥
폐쇄성 (비이동)	59.2	29.8	77.7	24.5	26.0	39.7	33.3	46.5	21.5	36.8	27.9	18.1	33.7	54.5
한국인 지역중심성	112.3	210.7	159.9	70.9	339.5	298.7	172.0	599.3	547.9	243.1	154.7	20.1	53.1	311.6
전체(일본인 등 포함) 지역중심성	49.7	110.3	121.8	37.7	143.9	127.2	81.0	176.9	121.2	129.4	103.2	14.3	35.2	102.7

폐쇄성(비이동)=한국 국적의 해당 부지역 출생자수/한국 국적의 해당 부지역 전체 인구수×100

한국인 지역중심성=한국 국적의 같은 도내 다른 부면지역 출생자수/한국 국적의 다른 도 지역 출생자수×100

전체 지역중심성=전체 국적의 같은 도내 다른 부면지역 출생자수/전체 국적의 다른 도와 해외 지역 출생자수×100

이 현저히 많았다. 인구유입량이 많아서 폐쇄성이 낮은 도시들 중에서 인천, 목포, 신의주는 한국인 기준의 지역중심성이 전체 인구이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이에 유입된 인구의 상당수는 같은 도내의 다른 부면지역 출생자였고, 반면 군산, 청진, 원산 등은 한국인과 전체 인구이동의 지역중심성이 낮고 그 차이가 적기에 일본인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모여든 것이다. 그리고 부산과 진남포는 일본인과 도내, 도간 이동에 의해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반도 내에서의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 군산, 청진, 원산 및 부산, 진남포 등은 전국적인 장거리 이동의 흡인지, 인천과 목포, 마산, 신의주, 함흥은 같은 도내 출생자들의 유입이 많은 단거리 이동의 흡인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O-D 행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참고적으로 O-D 행렬을 통해 출발지를 살펴해보았다. 출발지가 부가 아닌 도 단위로 되어 정방행의 행렬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전국의 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구 494,724명 중에서 경기도 출생자가 105,089명으로 약 2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경기도가 출생지인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각 부로 비교적 골고루 이동하였다. 그 밖에 평남, 경남, 경북 등이 출생지인 사람들이 전국의 부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두드러졌다.

5. 요약과 결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인 1914년 부제 그리고 1917년 지정면제가 실시된 후, 부 지역은 1915년에서 1930년까지 네 배에 육박하는 수준, 그리고 지정면들에서는 약 3.5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915년에서 1930년까지 전체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약 2%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에서 인구증가는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의 상당한 몫은 이동의 결과였다. 아울러 1920년 행정구역의 부와 지정면을 기준으로 약 4.62%였던 도시화율은 1930년 9.18%, 1940년 18.64%를 거쳐 해방 직전에는 23.37%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둘째, 1930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서 해당 부면의 출생자를 비이동, 같은 도내의 다른 부면 출생자를 도내 이동, 그리고 다른 도의 출생자를 도간 이동의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청진·용기·철원·원산·군산·대전·나남·조치원 등 개항장, 철도 분기점 및 군사·자원·산업 입지 등 일제의 효율적 식민 지배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도시지역은 장거리의 도간 이동 그리고 도내 이동의 흡인지로, 목포·마산·익산·인천·영등포 등 일부 개항장, 교통 도시 그리고 대구·평양·의주·공주 등 조선시대 각 도의 중심지에 해당되었던 곳들은 도내 이동에서 흡인지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경주·상주·통영·북청·진주·강릉·충주·해주 등 조선시대 전통적인 읍치였던 곳들은 도내 이동 및 인접한 농촌지역의 인구의 유입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도별 출생지 인구를 통해 15×14라는 O-D 행렬을 만들 수 있는 1930년 부 지역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당시 부 지역에 거주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이동으로 유입된 이들이며, 서울·평양·대구·부산 등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의 규모가 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인구 중 유입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청진·신의주·군산·목포·진남포·인천 등 일제에 의해 개발된 개항장으로 그 비중이 70%가 넘었다.

넷째, 출신 지역이 상이한 인구의 이동에 따른 도시화는 개별 도시의 사회적 이질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14개 부 지역의 사회적 폐쇄성과 단거리·장거리 이동을 일정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지역중심성을 측정하였다. 폐쇄성은 비이동 인구의 비율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중심성은 도내 이동과 도간 이동의 비율 각각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14년 부제가 실시될 때의 인구기준이 전체 인구가 아닌 일본인 거주자의 비율 또는 수가 우선되었기에, 도시화는 처음 시작은 일본인들의 이주에 의해 우선 확인되었다. 이후 1930년까지 도시화 진행과 한국인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서울·군산·청진·원산·부산·진남포 등은 전국적인 장거리 이동의 흡인지, 인천·목포·마산·신의주·함흥 등은 도내 이동과 같은 단거리 이동의 흡인지 역할을 하였고, O-D 행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도시화에 대해서 행정구역인 부와 지정면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인구이동 연구에 있어서 이동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누가, 왜에 대해서 즉 이동의 주체와 그 동기를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고, 이것은 이 연구의 한계가 된다. 하지만 당시 부와 지정면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출발지 유형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입지를 탐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제는 강압적이고 효율적인 식민지배라는 목적에 맞춰 우리 국토공간의 질서를 임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와 지정면 지역이 설정하였고, 그 기준은 전체 인구규모가 아닌 거주 일본인의 수와 비율이었다. 하지만 일본인이 다수 혹은 주도권을 장악하여 도시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후 시점, 자료 부족을 핑계로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1920년 이후부터는 한국인도 이동하여 유입되었고, 그 출발지가 인접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한 도시, 전국적인 장거리 이동이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및 그 두 가지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개항장, 철도교통이나 군사 도시들 중에서 군산·청진·원산 등으로 이동한 한국인들은 그 출생지의 범위가 전국적이었으며 이동거리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다. 하지만 개성·대구·평양·함흥의 경우에는 유입한 인구의 출생지가 같은 도내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부산·진남포는 도내와 도간의 이동자가 비슷하게 유입되었다. 이처럼 일제의 효율적 식민 지배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도시일수록 전국적 장거리 이동자의 유입지라는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통해 일제강점기 도시화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산물이며, 가도시화였다는 그간의 주장들은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부와 지정면들의 인구유입과 도시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개항장인 인천·목포·마산·신의주는 일제에 의해 개발되었지만 유입인구의 대부분은 같은 도내 지역의 출생자였고, 대구·평양·개성 등 조선시대 때부터 도시의 기능을 수행했던 부 지역들은 도내 이동자들이 유입되면서, 개성을 제외하고 두 도시는 다른 부 지역에 육박하는 수준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지정면 지역까지 확대시키면 제주·공주·광주·전주·경주·상주·안동·예천·통영·북청·진주·동래·강릉·충주·해주·의주·정주·선천·북청 등 읍치였던 곳에서도 신속하고 상당한 규모의 인구증가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갔다. 물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일부 지정면은 도청 소재지 또는 식민지 행정의 거점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최소한 유입된 인구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같은 도내와 인접한 농촌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이동의 지역중심성 값도 매우 높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

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근대성이 이식되면서 우리 국토의 정주체계가 식민지적 것과 전통적 것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구성되었고, 그 구조 아래에서 이중적인 도시화와 인구이동이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다.

주

- 1) 일제강점기 도시화에 대한 선행연구들로서 지리학에서는 홍경희(1962), 남영우(1989), 허우궁(2010) 등의 연구가 있고, 경제학·사회학·역사학 등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김홍순(2011b)이 정리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도시화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도시의 도시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두드러지고, 국토공간 전체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손정목(1996)에 따르면 이 밖에도 지정면의 면장은 일본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도 장관이 임명하는 상담역을 두게 하고, 지정면에 한하여 재정차관(기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정면이 아닌 다른 면 지역은 '보통면'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었다.
- 3) 松永 達(1991)과 한주성(2015)은 1930년 전라북도 지역으로 전입인구가 많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한국 근대 전자역사지도 편찬실(<http://khmap.org>)'에서 제공하는 1930년 부면 총 인구 중 '현재 거주 부면 출생자 비율'에 관한 전자지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서부지역 또는 호남평야와 개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면 지역에서는 자부면 출생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일제 강점기 산미증산계획 아래에서 전라북도 해안 지역과 범람원 일대에서 대규모 개간이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인구이동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 이 연구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신의주는 1929년 4월에 주변 지역이 새롭게 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확장이 이루어졌고, 몇몇 부지역도 그러했다. 이와 같은 구역확장은 해당 도시지역의 인구증가율과 자부면 출생자(비이동자)의 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구역확장에 따른 인구증가율 과대측정의 문제는 당시 인구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적절한 보정의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유입된 타도 및 도내 다른 부면 출생자 수를 식별하는 것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5) 이와 같은 권태환의 주장을 우리나라 전체 국토공간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도간 경계에 위치한 면지역들에서는 지역폐쇄성이 낮게 나타나고, '한국 근대 전자역사지도 편찬실(<http://khmap.org>)'에서 제공하는 1930년 '부면 총 인구 중 타도 출생자 비율'에 관한 전자지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에 속한 면지역들에서는 타도 출생자의 비율이 높아서 권태환의 계산에 근거한 지역폐쇄성은 매우 낮게 측정되지만, 실제로는 인접한 지역 출생자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의 경계선에 인접한 부지역의 수가 군산, 진남포 등 소수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수단으로 적용하였지만, 해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태환, 1990, "일제 시대의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1, 251-298.
- 김종규·강경원·손명철(역), 2014, *코리아: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 푸른길(Lautensach, H., 1945, *Korea: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und der Literatur*, Koehler Verlag).
- 김홍순, 2011a, "인구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도시화 성격: 일제 강점기와 그 전후 시기의 비교,"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23(2), 19-46.
- 김홍순, 2011b,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도시화 추이,"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6(4), 69-92.
- 남영우, 1989, "일제하 경성부의 토막촌 형성," 문화역사 지리, 1(1), 39-52.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 손정목, 2000,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신편한국사 44권(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77-298.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 조혜중, 2006, *새 인구론: 인구의 공간적·사회적 접근*, 푸른길.
- 한주성, 2015, *인구지리학*, 한울.
- 허우궁, 2010, *일제 강점기의 철도 수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홍경희, 1962, "한국의 도시화: 제1부 일정시대," 경북대학교논문집, 6(인문사회과학편), 287-326.
- Lee, H. K., 1936,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정섭

Ravenstein, E. G., 1876, Census of the British Isles, 1871: Birthplaces and migration, *The Geographical Magazine*, 3, 173-177(july), 201-206(august), 229-233 (september).

Trewartha T. G. and Zelinsky W., 1955, Population Distribution and Change in Korea 1925-1949, *Geographical Review*, 45(1), 1-26.

松永 達, 1991, 1930年代朝鮮内勞動力移動について, 經濟論叢, 147(1-2-3), 39-61.

교신: 이정섭,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yisup@gnu.ac.kr, 전화: 055-772-2186)

Correspondence: Lee, Chung Sup,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e-mail: yisup@gnu.ac.kr, phone: +82-55-772-2186)

최초투고일 2017. 2. 12

수정일 2017. 2. 19

최종접수일 2017. 2. 25